

[종합·해설]

■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 확대일로

‘미림’팀 4년간 도청테이프 1천여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이 1990년대 중·후반 정·재·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사석 발언을 무차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안기부내 또 다른 도청조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25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미림팀장이었던 K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 여론이 많다”고 밝히는 한편 “미림팀 외에 다른 도청조직은 없었다”고 일부 언론의 주장을 반박했다.

1994~98년초 ‘미림팀’ 팀장이었다고 확인한 K씨는 24일 경기도 모처의 은거지에서 SBS와 가진 회견에서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실과 테이프의 제작 및 유통 경로 등을 소상히 밝혔다.

◇도청 테이프 제작·유통 경위=1993년초 O대공정책임장은 정·국·재·언론계 인사간 대화 도청을 전담하는 ‘미림팀’을 재가동했다. 이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2월까지 4년여 활동 기간 중 1천여개의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후인 99년 K씨는 국정원의 구조조정으로 해직되자 도청테이프 100~200여개를 들고 나와 한 재미 교포에게 이 갈

정·재계·언론 무차별 도청 도청정보로 기업 협박도 유력인사 전담 도청공작도

은 사실을 알려줬다. K씨는 국정원 해직자들의 모임인 ‘국가사(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에 가입해 활동하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말을 종종한 것으로 보도됐다. K씨로부터 테이프를 건네받은 재미교포는 이후 삼성 등을 접촉해 6억원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원은 삼성사의 제보로 K씨로부터 테이프와 녹취록 등을 회수했으나 전량 회수됐는지 여부와 처리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K씨는 “당시 감찰실장에게 테이프를 반납했고 후에 국정원장 지시로 불태웠다고 들었다”면서 “나도 살아야 하니까 다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MBC가 문제의 테이프 내용에 대한 보도 여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중순 각 언론사들이 다른 테이프들을 입수, 경쟁적으로 보도하게 됐다.

◇도청 정보 처리=안기부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무차별적 불법도청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도청기를 사적으로 설치한 한성식집, 호텔 식당 등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도청 작업 후 녹취록으로 풀어 미림팀의 K 팀장이 당시 O대공정책임장에게 보고했다. ‘미림’은 강남의 한 음식점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보고 방식은 보안을 위해 프린트(출고)가 금지된 컴퓨터 온라인망을 이용해 O실장에게 보내졌으며 이 내용은 O실장의 보좌관인 김기삼씨가 필사해 O실장에게 보고했으며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

◇‘새로운 도청팀 존재’ 여부=안기부는 또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시절 특수도청팀인 ‘미림’을 운영한 것 외에도 현안별 태스크포스팀 성격의 특수조직을 만들어 유력인사들을 도청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선일보보는 25일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 도청팀이 대공정책임(이하 대정실) 산하 ‘O팀’에 소속돼 있었으며 이 내용은 생길 때마다 3,4명씩 팀을 이뤄 도청공작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25일 “신규 도청팀이 존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연남뉴스

“기자들 전송기사도 해킹”

김기삼 前 안기부 직원 증언 “취재기자 전화도 도청”

불법 도청 테이프 파문이 세계에 일고 있는 가운데 옛 안기부 직원이 일선 취재 기자의 전화도 도청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SBS TV ‘8뉴스’는 25일 옛 안기부 직원이었다던 김기삼씨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가 다른 여러 언론사 임원들의 대화도 도청했을 뿐 아니라 기자들의 휴대 전화

도 도청했다고 들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기자들,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노트북을 통해 본사로 송고하는 기사를 해킹했다. 지금은 조심해서 할 것”이라고 밝혀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2000년 당시 전국의 해커를 모아서 국정원이 노트북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들었다”는 내용도 밝혔다. SBS는 “취재 기자 휴대 전화 및 노트북 해킹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전면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연남뉴스



배식봉사

25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구일정신요양원을 방문한 지병문(앞줄) 외 10명(중에서 3번째) 의원이 정신·지체장애 의생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있다. /L정기자mjna@kwangju.co.kr

“이학수·홍석현·신한국 경선 9명 포함”

참여연대, ‘X파일’ 관련 20명 검찰 고발 “삼성, 기아 인수로비 뇌물죄 처벌해야”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안기부 X-파일’ 관련자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삼 사무처장은 “고발대상자 중 언론에 의해 실명이 공개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대가성이 확인된 경우 실명을 공개했지만 아직 대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당시 야당 후보인 김대중 대통령과 신한국당 경선후보 9명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실명표 상의) 고발장 상의) 명시 방법의 차이일뿐 97년 당시 대선 여야후보 모두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처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 일문일답. -이회창 후보측만 고발하는 건가

▲아니다. 삼성 측이 이 전 후보 외에도 1997년 당시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 정치인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자동차 문제로 삼성이 여야국회의원 모두에게 로비를 벌였어야 했으므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치인에 대해서도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를 대해서도 고발했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고발 대상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이회창·이회성·서상목·고홍길씨가 정치자금법 시행일인 1997년 11월14일 이전에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이후 수수한 것이라도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이 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내명에게 삼성이 준 자금은 당시 삼성

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기자자동차 인수에 대한 로비 자금, 즉 대가성 뇌물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에게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해야하는 이유는 ▲현재까지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직무와 관련해 검사가 뜯 받는 관행이 용인되고 있는데 1997년 당시 검사가 받은 돈은 단지 떡값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96년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이 건희 회장이 징역유예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 돈은 단순히 인사처리가 아니라 삼성과 삼성총수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안기부는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안기부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삼성 불법로비자금 수사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아니다.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 통해 안기부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넘기게 된 채로서는 불가능하다.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재발방지가 이뤄져야한다. /연남뉴스

고개숙인 삼성 “물의 빚어 죄송”

대국민 사과문 발표

삼성에는 불법 도청파일 공개로 촉발된 97년 대선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 “법률적인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근거로 한 언론보도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25일 발표했다. 삼성은 임직원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소문에 불과한 것도 있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면도 있다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스럽게 그지 없다”고 사과했다.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단절하고 올바르게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지난 3일 그룹차원에서 윤리경영

과 투명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언했던 ‘삼성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들의 기본적 행동원칙을 준수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또한 “지난 99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청 테이프를 가액을 요구하며 사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며 테이프가 공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자진해서 국가 기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옳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불법도청과 무책임한 공개 및 유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은 그러나 이번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연남뉴스

입당원서 권유 파문관련 전경태 구레군수 수사

전경태 구레군수의 입당원서 파문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구레경찰서는 25일 “전 군수가 자신이 추천한 것으로 된 민주당 입당원서를 주민들로부터 받는 과정에서 사전검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수사를 요청했음에 따라 23일 전 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군수를 상대로 군수의 직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주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았는지와 이 과정에 대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으며, 불법도청을 받았지만 전 군수는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한 주민 3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사실확인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구레=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공시 최고

아래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일인 2005. 10. 31.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26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관경평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and details of the legal proceedings.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and details of the legal proceedings.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목적, and details of the legal proceedings.